

실적 없는 '해상풍력' 상생형 일자리 신청서도 못내

'해상풍력'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 2년

일자리 등 기본 신청 조건 미달... 기자재 업체도 사업 참여 의사 철회
주민 참여·이익 공유 등 진전 없어... 후발 주자 대구·구미 먼저 선정
전남도 "풍력발전 특별법 통과 위해 국회와 협조... 신속 지정 노력"

2021년 2월 5일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동계와 21개 기업·단체, 어촌계 등 11개 주민대표단체, 전남도와 목포시 등 4개 기관을 합한 37개 기관이 참석했다. 보도자료에는 노·사·민·정이 자발적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담았다. 기업도 450개 유치를 기대했었다. 당시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 "전남형 일자리로 이뤄지는 세계최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이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년이 흐른 지금 '전남형 상생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어졌을까. 우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단계인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도 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받기 위한 기본 신청 조건인 '3년 이내 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200억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운 발전사·풍력 기업이 여태껏 없었기 때문이다. 상생형 일자리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도 불리며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勞)·사(使)·민(民)·정(政) 등이 주체로 나서 고용·투자·

북리후생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하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고 부지 임대료를 할인받거나 중소기업 전용 자금, 특례보증 신설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 인프라·교육훈련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당시 전남도 안팎에서는 정부 지정이 이뤄지면 3년간의 세부 투자·고용 계획을 제시해 풍력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장기적 목표도 2030년까지 12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2년 넘도록 정부에 '상생일자리 지정'을 위한 신청서조차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일자리' 협약에 참여했던 발전사들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애초부터 신청 대상 기업이 아닌 만큼 제외하더라도, 발전사 외 나머지 터빈

·타워(풍력지대)·케이블·하부구조물 제작 등을 맡는 10개 풍력 기자재 업체 대부분도 투자·고용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하는 여건이라며 사업 참여 의사를 철회했다. 정부 지정을 받으려면 3년 간 투자·고용 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국내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딘 규제 완화 속도, 고금리 기조 속 투자 심리 등을 감안하면 섣뜻 뛰어들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3년 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도 풍력발전 산업 특정 분야에만 치우쳐 있는데다, 이마저도 풍력산업 여건·주변 항만·배후산단 개발 상황을 지켜본 뒤 투자하겠다는 유동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약 이후 2년 넘도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도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동조합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쓰이는 각종 지원금도

면 얘기다. 이렇다 보니 전남보다 늦게 상생협약을 맺고 사업에 뛰어든 대구, 구미가 먼저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는가 하면,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익산마저 전남보다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풍력발전 추진 속도를 높일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조하면서 사업 참여기업을 조속히 확정하고 일자리 컨설팅과 개발 방안을 수립,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공동 투자로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M)가 정부가 지정한 첫 사례(2020년 6월)로 현재 광주, 밀양(2020년 10월·뿌리기업 주불제품), 황성(2020년 10월·초소형 전기화물차), 군산(2021년 2월·전기차), 부산(2021년 2월·전기차 부품), 구미(2021년 12월·이차전지 양극재), 대구(2022년 12월·스마트 모빌리티) 등 7곳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선정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 에너지 자유특구 전력공급 통전식 에너지산업 규제자유특구 전력공급 통전식이 2일 오후 나주시 동수동 나주혁신산단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운영태 나주시장 등이 통전 세례모니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광주 일상 속 생활문화 공간 20곳 조성

광주시 8일 설명회... 5개 자치구, 공유 공간 운영 단체 공모

광주시에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 아트벙커' 조성 지원에 나선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생활문화 아트벙커'는 공공·민간의 유휴공간을 거점으로, 강습·공연·전시·연습·발표 등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를 통해 처음으로 문화공간 20여 곳을 조성해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신청지역은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그 공간을 지역과 공유할 의지가 있는 민간단체 또는 주민모임(3인 이상)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1곳당

1000만원 내외로 공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소규모 수선비 등을 지원받는다. 5개 자치구 중 동·남·북·광산구는 2일부터, 서구는 15일부터 공모할 예정이며, 공간소재지 자치구 사업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 현장확인, 면접심사 등을 통해 4월 초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아트벙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8일 오후 3시 시청 무등홀에서 아트벙커 운영에 관심있는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효율화' 지역민에 듣는다

16일 광주시의회·전남도청서 공청회... '분리' 놓고 의견수렴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에게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연구원 안팎에서는 분리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가 오는 16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각각 개최된다. 광주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하는 이날 공청회는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8조 2항에 따른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연구원 분리를 위해 해산할 경우에 사·도는 조례안 제출 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

시돼 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전남도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명 안팎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자들이 초광역 시대 광주전남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원 분리론의 필요성 뿐 아니라 통합 유지론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격한 찬·반 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운영이 과연 방향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한 이후 전남도의회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다른 광주와 전남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미흡 등을 지적하며 맞장구를 치며 분리론이 거세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시 올 첫 추경 1216억원 편성

상생카드 발행·창업 기업 제품 실증·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광주시는 2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1216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반영되면 광주시 올해 예산은 7조 1102억원에서 1.7% 증가한 7조 2318억원이 된다. 일반 회계가 1111억원(1.9%) 늘어난 5조 9476억원, 특별회계는 105억원(0.8%) 증액된 1조 2842억원이다. 광주시는 민생 안정, 창업, 산업, 근로 복지를 중점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상생카드 발행 지원 106억원, 창업 기업 제품 실증 30억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70억원, 창업페스티벌 1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42억원, 지역 유니콘 육성 10억원 등이 반영했다. 시민 편의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30억원, 노후상수관로 정비 50억원, 노후가로등 밝기 개선 16억원, 송정역~광주역 셔틀 열차 운행 7억 5000만원, 범죄취약지역 방법

CCTV 설치 보강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돌봄 강화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 39억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65억원,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8억5000만원, 하남 시립도서관 건립 33억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9000만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14억원 등을 예산안에 포함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제때 이뤄지도록 예년보다 일찍 추경을 추진하면서 지방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 범위에서 편성했다"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손에 잡히는 변화로 옮겨가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